현군수 비리 낙마…지방의원·관료출신 대거 도전장

무안군수

무안군수 선거가 치열해졌다. 김철주 군수가 뇌물수수 혐의로 사법처리돼 무주공산이 됐기 때문이다. 현직 프리미엄이 사라지면서 지방의원과 관료 출신 인사들이 대거 도전장을 내고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에서 '사고지역 전략공천설'이 흘러나오면서 변수가 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정영덕(56) 전남도의원과 이동진(61) 무안군의회 의장, 김산(60) 전 무안군의회 의장, 홍금표(67) 전 무안군 서기관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민주평화당에서는 나상옥(65) 전 목포무안신안축협 조합장과 김재훈(58) 전남도체육회 부회장이 나섰다.

정영덕 도의원은 지난해 말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등 일찌감치 군수의 뜻을 세우고 보폭을 넓히고 있다. 지난달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성장 잠재력이 큰 무안군이 날개없이 추락했다"며 "군민들의 허탈감과 뼈아픈 상처를 치유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남도에서 20여년간 도시계획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등 행·의정을 아우른 폭넓은 경험이 자산이다. 또 깨끗한 이미지에 인지도도 높다.

김산 전 군의장

이동진 군의장

정영덕 도의원

홍금표 전 서기관

김재훈 부회장

나상옥 전 조합장

민주 '사고지역 전략공천설' 흘러나와
민주 4명·평화당 2명 당내 경선 펼쳐

이동진 의장은 탄탄한 조직력이 돋보인다. 초선인데도 의장에 오를만큼 정치력도 갖췄다는 평가다. 이 의장은 '일일 명예의장' 제도를 활성화하면서 의장실 문턱을 낮추고 군민 삶의 질 향상에 힘을 쏟고 있다. 그는 "어려움을 떨쳐버리고 전남행정 1번지의 위상을 바로세워야 할 때"라며 '투명행정·소통화합하는 행복무안 건설'을 약속했다.

김산 전 의장은 2차례 무안군의원을 지냈다. 민주당 전남도당 무안미래전략특별위원장을 맡아 무안반도 통합 반대, 군산공항 국제선 허용 반대 등 지역현안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놨다. 그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역점사업으로 제시했다.

홍금표 전 서기관은 36년간의 행정경험이 최대 자산이다. 무안군청 건설과장·상하수도사업소장·일로읍장·삼향면장 등을 거쳐 무안군정에 밝다는 게 강점이다. 그는 "그동안 군수 선거로 군민들이 반목하고 편가르기가 만연해 있다"며 "정당을 떠난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하고 의견을 들어 상생·협력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간판을 단 나상옥 전 조합장은 풍부한 선거 경험과 축협의 절대적 지지가 원동력이다. 선 굵은 정치 스타일과 인지도를 바탕으로 무안 재도약의 적임자임을 내세우며 바닥 민심을 다지고 있다.

김재훈 부회장은 지난 7일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젊은 새 인물을 중심으로 관용과 포용의 큰 정치를 할 사람으로 바꿔야 한다. 보다 활기찬 무안의 심부름꾼이 필요하다"며 "지역민과 함께하는 정치, 생활정치의 새 역사를 지역민들과 함께 열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무안=임동현기자 jdh@kwangju.co.kr

입지자들 "깨끗한 군정·화합 펼치겠다"

무안공항 활성화 등 쟁점
남악신도시 표심 변수로

무안군수 선거는 현직 군수가 비리 혐의로 낙마한데 따른 도덕성과 지역사회 자존심 회복, 흐트러진 공직기강 재정립 등이 화두가 되고 있다.

입지자 모두 이구동성으로 깨끗한 군정과 화합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지역민들도 도덕성이 검증된 후보를 뽑겠다는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다.

여기에 무안국제공항과 남악신도시 활성화, 무안시 승격 등 서남권 중추 도시로의 도약 등의 현안이 선거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무안지역 내 균형발전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무안은 국도변(청계·무안), 철도변(삼향·일로·몽탄), 해안선(현경·망운, 운남, 해제)에 따라 발전정도에 격차가 심하다. 낙후된 해안선 지역의 SOC 투자와 내륙과 해안의 시너지 연계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민주당의 전략공천 여부와 인구 밀집지역인 남악신도시 표심 등도 선거결과를 가를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남악신도시 활성화는 무안군정의 제1목표다. 목포와 무안 접경지에 조성된 남악신도시는 전남도청과 전남교육청 등 신청사가 이전함에 따라 주목받기 시작했다.

2006년 처음 아파트 입주 이후 인구 5만의 도시가 생성됐다. 삼향·일로 선거인수가 무안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는 탓에 남악신도시의 표심이 선거 승패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인구 10만명을 달성해 무안시로 승격하는 것도 선거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7월말 기준 무안 인구수는 8만2596명이다. 도청 이전 이후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저출산·초고령화로 인구유입이 둔화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무안=임동현기자 jdh@

동구청장-구의회 '지방채 조기상환 예산 삭감' 공방

김성환 "또다른 저의 있다" 주장
일부 의원 "현안사업 우선 해결"

김성환 광주시 동구청장이 지방채 조기상환 예산을 절반으로 삭감한 동구의회에 대해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일부 동구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오히려 김 청장이 부채 상환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청장은 13일 성명을 내고 "동구의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구청이 제출한 지방채 조기상환분 20억원 중 10억원을 특별한 이유 없이 삭감 의결했다"며 "구청이 현안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중앙부처 등으로부터 충분히 확보하고 있고 지방채 조기상환을 통해 이자만 2억7500만원 절약할 수 있다는 설명에도 의회가 삭감한 데는 또다른 저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동구는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지방채 10억원(2022년 상환)과 도시재생선도사업 관련 지방채 10억원(2030년 상환)을 보유하고 있다.

김 청장은 동구의원 8명 가운데 같은 당(민주평화당) 소속 홍기월·조기춘 의원과 기권 1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이 지방채 조기상환분 삭감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김 청장은 "항상 동구는 적은 예산, 인구 등으로 위축된 분위기였는데 이를 바꿔보고자 각종 상금 등으로 부채 상환 예산을 따로 마련했다"며 "지방채 조기상환 달성 실패의 책임이 동구의회에 있음을 분명히 적시하며 추경 예산에 또다시 올려 꼭 '부채 제로'를 선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영원 동구의원은 같은날 입장문을 발표해 김 청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전 의원은 "동구는 주차장, 소방도로, 낡은 하수구 등 현안사업이 많은데 주민 편익 사업 투자가 먼저인지 부채상환이 급선무인지 판단의 문제다"며 "의원 입장에서는 부채 제로 선언이라는 상징성이 더 정치적이고 선거철이 아니면 이런 결정을 했을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 "이자 2억7500만원을 아끼는 것보다 구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게 부가가치가 훨씬 더 높다"며 "(김 청장은)결론적으로 부채제로 선언과 동시에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속셈이다"고 비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시의회, 구의원 선거구 획정안 심의 파행

6·13 지방선거에서 광주지역 기초의원을 뽑는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놓고 시의회 상임위가 광산구의원 숫자 조정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산회했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3일 자치구의회 의원 정수 조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광주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안에 따른 것이다.

선거구 획정위 최종안은 인구와 동수 비율 5대 5를 기초로 의원 정수를 조정해 구의원 2명을 선출하는 2인 선거구를 종전 16개에서 2개로 줄였다. 대신 3인 선거구는 9개에서 17개로 늘리고 4인 선거구 1개를 신설하도록 했다. 하지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광산구 선거구에 관한 수정의견이 제출되면서 의원 간 이견이 불거졌다.

앞서 논의됐던 획정위안은 광산 3선거구와 5선거구에서 각각 3명의 구의원을 뽑도록 했으나, 획정위안을 보완한 수정의견은 3선거구를 4명으로 늘리고 5선거구를 2명으로 줄이도록 했다.

일부 의원은 수정의견에 강하게 반대했다. 민중당 소속인 시의회 이미옥 의원은 "소수정당 의원으로서 사회적 약자, 여성 등 다양한 세력의 의회 진출을 위해 중선거구가 유지돼야 한다"며 "2인 축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6·13 선거 현장

구청장·시장·군수 후보

문인 "남북정상회담 적극 환영"

광주 북구청장에 출마한 문인(전 광주시 행정부시장) 예비후보가 13일 "남북정상회담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논평을 통해 "지금까지 남북관계와 달리 우리가 직접 남북관계를 주도하는 혁명적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금까지 현대 한국정치사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남북관계의 거대한 변화가 예고된다"고 평가했다.

영광 출신인 문 전 부시장은 광주시 도로계획과장·자치행정국장·기획조정실장,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지원국장,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오광록기자 kroh@

최성현 전 부군수, 구례군수 출마 선언

최성현 전 구례부군수가 군수 출마를 선언하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뛰어들었다.

최 전 부군수는 13일 구례 섬진아트홀 평생교육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13지방선거 구례군수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화합과 통합을 바탕으로 군민을 섬기고 더불어 행복한 구례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며 "다시 찾는 청정구례, 생각나는 관광구례를 건설해 관광메카의 명성을 되찾고 새롭게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전 부군수는 1974년 구례군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전남도의회 수석전문위원·해양항만과장을 거쳐 진도부군수를 역임했다. 현재 민주당 전남도당 농산물유통발전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구례=이진택기자 ljt@kwangju.co.kr

장성수 '4차 산업혁명'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청장 예비후보 장성수 전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13일 광주시 광산구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장성수 예비후보는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대와는 전혀 다른 시대로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시민들이 많다"면서 "4차 산업혁명은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것이며, 두려워하지 않고 철저히 준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우리는 지능정보기술의 약점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이 하지 못하는 것'을 찾아서 대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김순빈 시의회 부의장 여수시장 출마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순빈 여수시의회 부의장이 13일 "서민이 살기 좋은 여수를 만들겠다"며 여수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김 부의장은 이날 오후 이순신광장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여수는 민생, 행정, 정치, 경제, 청년의 미래가 위기이다"면서 "여수의 성장 동력을 회복하고 청년 등이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요 공약으로 여수시청사 통합과 교육도시 육성, 해양관광 명품도시 건설, 여천역 환승시설 여건 개선 등을 제시했다. 여수 출신인 김 부의장은 3선 시의원으로 지난 대선때 문재인 후보 특보로 활동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